

빈곤계층의 경제활동상태와 빈곤 탈출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1. 문제 제기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면서 빈곤 진입과 탈출의 동태적 추이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빈곤 연구는 노인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등 한계 계층의 절대적 빈곤만이 아니라 취업하더라도 빈곤 상태를 탈출하지 못하는 근로빈곤이라는 새로운 빈곤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주제의 심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수급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탈빈곤정책으로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빈곤과 경제활동상태를 연관지어 분석한 국내의 주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구인회(2001)는 경제위기 직후 빈곤 문제를 경제활동상태와 연관지어 분석한 선구적인 연구로 평가된다. 그는 근로능력 있는 빈곤가구가 빈곤계층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 이전 시기의 빈곤 문제와 구별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빈곤 진입 및 탈출의 결정요인을 인구학적인 변화와 소득관련 변화로 나누어, 위계적인 순서로 빈곤의 이행을 초래한 요인을 식별하는 동태적인 분석을 통해, 근로소득의 변화가 빈곤 진입 및 탈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근로소득 변화의 상당 부분은 실업 및 취업 여부로만 설명되지 않음을 규명하였다. 이는 취업만으로는 빈곤의 탈출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분석결과이다.

황덕순(2001)은 가구내 취업자수가 빈곤 여부의 결정이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빈곤지속기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제활동 참여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취업자 가운데서도 하위 숙련직종은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 취업의 질이 빈곤 탈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병희·정재호(2002)는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 장기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용생산직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노동력 상태의 빈번한 이동에 따라 반복적인 빈곤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취업으로 인한 장기빈곤 문제만이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빈곤계층의 반복적인 빈곤 문제가 탈빈곤정책의 주된 대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금재호(2003)는 근로빈곤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동태적인 이행과정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전체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취업자가 있는 빈곤 가구이다. 또한 근로빈곤가구는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빈곤에서 탈출하더라도 전체 가구소득의 20~40%의 하위 소득 분위에 머무르고 있다.

홍경준(2004)은 빈곤이행 관련 사건들에 대한 위계적 분석과 빈곤이탈에 대한 이산시간 분석을 통해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이 빈곤 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개인별 빈곤주기를 구성하여 빈곤의 동태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 연구는 빈곤에 진입한 가구의 상당수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빈곤으로부터 이탈하며, 그러한 이탈이 주로 취업관련 요인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공공부조 의존성을 가지거나 근로동기가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폭 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의 질을 높여 보다 많은 근로소득액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주요한 탈빈곤정책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빈곤계층의 경제활동상태와 빈곤 이행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홍경준(2004)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가구 단위로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빈곤 여부를 판별하는 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은 개인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구 단위의 경제활동상태 분석은 가구내 취업한 가구원수나 가구주의 취업 형태 등에 한정되었으며,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을 모색하는 데에는 불충분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을 이용하여 ‘가구-개인의 연계 패널자료(matched panel data)’를 구성하여 빈곤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고, 개인 단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황덕순(2000)의 방법에 따라 빈곤계층을 근로능력 유무와 가구내 취업 가구원 유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함으로써 빈곤계층의 유형별 차이를 살펴본다. 특히 취업자가 있는 근로빈곤계층

의 종사상 지위와 근로소득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취업 자체가 빈곤 탈출로 이어지지 않음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살펴본다. 반복적인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따른 만성적인 저소득이 근로빈곤을 야기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절에서는 개인 단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시간 해자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discrete time hazard analysis)한다. 특히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 그리고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빈곤의 경험이 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2. 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

빈곤과 경제활동상태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구 단위의 빈곤 여부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정보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 때 구인회(2001)와 홍경준(2004)의 지적처럼, 「한국노동패널」에서 가구 소득 정보의 시점과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정보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구 특성 및 개인 관련 정보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묻고 있지만, 소득 정보는 조사 이전 년도의 연간 소득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가구조사에서 파악된 2002년의 소득정보를 5차년도의 가구 및 개인조사에서 파악된 2002년의 가구 정보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정보를 결합하였다. 이에 따라 두 조사에 모두 응답하고 총소득이 0보다 큰 3,900가구와 15세 이상인 10,061명의 개인표본을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이 때 빈곤 여부의 판단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실태조사의 소득정보는 과소 응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채택하여 중위 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정의하였다¹⁾. 또한 가구 규모에 따른 욕구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가구균등화지수로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가구균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정책적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는 3년마다 전물량방식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계측조사하고 있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소득인정액은 2003년부터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가구 소득을 기초로 상대적 빈곤 가구를 구분하는 본 연구의 정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절대적 빈곤선과 다를 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양의무자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인 빈곤 가구 정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화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구 총소득²⁾이 상대적 빈곤선³⁾에 못미치는 가구를 빈곤 가구로 판별하였다.

빈곤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구 내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계층을 근로능력 유무와 가구내 취업 가구원 유무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은 가구원이 18세 미만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주요 활동상태를 ‘연로’ 또는 ‘심신장애’로 응답한 자로만 구성된 경우로 정의된다.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자활 노력 지원보다 사회적 보호를 통한 최저생활의 보장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자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근로능력계층’과 ‘근로빈곤계층’으로 구분하였다. 근로능력계층은 취업자가 없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근로빈곤계층은 취업자가 있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하여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얻는 계층이다. 근로빈곤계층은 취업상태에 있더라도 고용의 불안정에 따라 반복적인 실업과 비정규직화의 위험이 높으며, 이에 따라 빈곤상태로의 진입과 탈출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⁴⁾. 따라서 근로빈곤계층의 빈곤 탈출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취업능력의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이 요구된다.

<표 1>은 빈곤계층의 유형별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상대적 빈곤 기준으로 빈곤가구의 비중은 2002년에 21.1%이며, 빈곤상태에 놓인 개인의 비중은 16.7%이다. 빈곤개인의 비중이 빈곤가구의 비중보다 낮은 것은 빈곤가구가 노인 가구주 가구와 편부모 가구주 가구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빈곤가구의 가구원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2) 「한국노동패널」은 세금을 제외한 가구의 연간 소득을 유형별로 묻고 있다. 가구의 총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회보험소득+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기타소득)을 합하여 구하였다.

3) 가구균등화지수로 조정한 빈곤선은 50.2만원이며, 평균 소득의 40.6%에 해당한다.

4) 이병희·정재호(2002)는 1998~2001년의 「도시가계조사」 분기 자료를 연결한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빈곤가구의 80%가 1년 내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지만, 빈곤상태로부터 벗어난 가구의 60%가 1년 만에 빈곤상태로 재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취업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빈곤화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계층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빈곤계층이 가구 기준으로 9.8%, 개인 기준으로 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근로무능력계층이 가구 기준으로 6.3%이며, 근로 무능력계층의 가구원수가 적기 때문에 개인 기준으로는 3.5%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자가 없는 근로능력계층은 가구 기준으로 5.0%, 개인 기준으로 3.6%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하는 빈곤(working poor)이 빈곤의 주된 형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표 1> 빈곤 유형별 분포(2002년)

(단위 : 가구, %, 명)

		가구기준		개인기준	
		빈도수	(비중)	빈도수	(비중)
비 빈곤계층		3,076	(78.9)	8,376	(83.3)
빈곤계층	근로무능력계층	245	(6.3)	353	(3.5)
	취업자가 없는 근로능력계층	194	(5.0)	364	(3.6)
	근로빈곤계층	383	(9.8)	968	(9.6)
전체		3,898	(100.0)	10,061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표 2>는 빈곤 유형별 가구 특성과 소득 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분석 과정에서 구인회 (2001)의 방법에 따라 가구주의 특성별로 가구 유형을 분류하였다. 우선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주 가구를 구분하고, 다시 비노인 가구주 가구 가운데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편부모 가구를 분류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가구를 일반 가구로 정의하였다. 노인 가구주 가구 가운데 빈곤에 처한 비중은 무려 59.2%에 이르며, 그 대다수는 근로무능력 상태에 놓여 있다. 한편 편부모 가구 가운데 빈곤 가구는 37.8%이며, 그 가운데 근로빈곤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가구 가운데 9.5%라는 적지 않은 가구가 근로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 유형별로 소득 구성을 보면, 근로 무능력 가구와 취업자가 없는 근로능력가구의 주된 소득 원천은 친척·친지로부터의 사적 이전 소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적부조나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 이전소득은 전체 소득의 20% 내외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역할이 미흡함을 보여 준다(홍경준, 2004). 한편 비 빈곤가구와 근로빈곤가구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특징을 볼 수 있다. 평균 취업가구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소득원천별 구성비중을 보더라도 금융·부동산 등의 재산소득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등 유사하게

나타난다. 결국 비 빈곤가구와 근로빈곤가구의 차이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근로소득의 격차이다. 이는 저임금과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근로빈곤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빈곤 유형별 가구 특성 및 소득 구성(2002년, 가구 기준)

(단위 : 가구, 명, 만원, %)

		비 빈곤가구		빈곤가구					
				근로무능력가구		취업자 없는 근로능력가구		근로빈곤가구	
가구 유형	노인가구주 가구	253	[40.8]	245	[39.5]	65	[10.5]	57	[9.2]
	편부모 가구	51	[62.2]	0	[0.0]	10	[12.2]	21	[25.6]
	일반 가구	2,772	[86.7]	0	[0.0]	119	[3.7]	305	[9.5]
가구원수		3.6		1.5		2.5		3.3	
취업가구원수		1.6		0.3		0.0		1.3	
소득 구성	총소득	277.5	(100.0)	28.2	(100.0)	35.1	(100.0)	62.2	(100.0)
	근로소득	239.6	(86.3)	8.0	(28.3)	10.0	(28.6)	55.5	(89.2)
	금융소득	3.3	(1.2)	1.0	(3.5)	1.5	(4.4)	0.3	(0.5)
	부동산소득	14.8	(5.3)	2.3	(8.1)	3.0	(8.6)	0.6	(0.9)
	공적 이전소득	5.1	(1.8)	5.6	(19.8)	7.2	(20.4)	2.9	(4.7)
	사적 이전소득	6.2	(2.2)	11.3	(39.8)	13.3	(37.9)	2.9	(4.7)
	기타소득	8.6	(3.1)	0.1	(0.5)	0.0	(0.1)	0.0	(0.0)

주 : []은 가구 유형별 빈곤 유형의 비중이며, ()은 빈곤유형별 소득 구성 비중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표 3>은 빈곤유형별로 근로능력이 있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우선 근로빈곤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취업/인구의 비중은 68.2%로 나타나, 비빈곤계층의 72.7%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취업의 질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근로빈곤계층에서는 자영업자와 이를 돕는 무급가족종사자가 많고,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으며,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임시·일용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가구 내에 취업자가 없는 근로능력계층에서는 실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또한 높다.

<표 3> 빈곤 유형별 경제활동상태(2002년, 개인 기준)

(단위 : 명, %)

		비 빈곤계층		취업자 없는 근로능력계층		근로빈곤계층	
취업	상용직	2,725	(40.1)			149	(20.8)
	임시직	363	(5.3)			50	(7.0)
	일용직	323	(4.7)			64	(8.9)
	고용주	429	(6.3)			21	(2.9)
	자영업자	760	(11.2)			145	(20.2)
	무급가족종사자	346	(5.1)			60	(8.4)
	소계	4,946	(72.7)			489	(68.2)
실업		140	(2.1)	27	(14.1)	28	(3.9)
비경황	취업희망 비경황	191	(2.8)	28	(14.6)	44	(6.1)
	순수 비경황	1,524	(22.4)	137	(71.4)	156	(21.8)
	소계	1,715	(25.2)	165	(85.9)	200	(27.9)
전체		6,801	(100.0)	192	(100.0)	717	(100.0)

주 1)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면서 비경제활동인구인 자, 심신 장애, 학교 재학 등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 제외

2) Chi-Square=887.8246,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근로소득 측면에서 빈곤 문제를 살펴본 것이 <표 4>이다. 취업자 가운데 저소득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빈곤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때 OECD(2004)의 정의에 따라 중위 소득의 2/3 이하의 근로소득을 받는 취업자를 저소득 취업자로 정의하였다. 근로빈곤 계층 가운데 절반을 상회하는 54.8%의 취업자가 저소득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비 빈곤계층에 속하는 저소득 취업자 비중 22.9%에 비해 2.4배에 이른다. 근로빈곤계층 가운데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상용직 근로자의 37.8%, 고용주의 42.9%도 낮은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는 빈곤 문제가 단순히 취업 여부만이 아니라 취업의 질과 저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빈곤 유형별 취업자 중 저소득 취업자의 비중(2002년, 개인 기준)

(단위 : %)

	비 빈곤계층	근로빈곤계층
상용직	16.4	37.8
임시직	51.9	83.7
일용직	41.5	68.3
고용주	10.7	42.9
자영업자	31.3	58.4
전체	22.9	54.8

주 : 근로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인 취업자를 저소득 취업자로 정의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3. 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빈곤과 경제활동상태간의 관계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의 제1차 연도(1998년)에서 제6차 연도(2003년)까지의 6개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개인의 연계 패널자료(matched panel data)’를 구성하였다. 6차 조사까지 가구조사에 모두 응답하고, 가구 소득이 파악된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분가 가구는 제외하였다⁵⁾. 한편 가구 소득 정보의 시점과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정보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1차년도의 가구 특성 및 개인 정보와 2차년도의 가구 소득 정보를 결합하고, 2차년도의 가구 특성 및 개인 정보와 3차년도의 가구 소득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모두 5개년에 걸친 자료를 구성하였다. 한편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자료도 5개년에 걸쳐 모두 응답한 개인으로 국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성한 표본은 2,423가구, 15세 이상 5,504명의 1998~2002년에 걸친 정보를 통합(pooling)한 27,520개 관측치이다.

<표 5>는 이웃하는 년도별로 개인을 대응시켜 연결패널자료(year-to-year matched panel data)를 구성하여, 빈곤 여부별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대각선 행렬은 특정 노동력 상태의 한 해 동안 지속성 정도를 보여준다. 빈곤계층은 비 빈곤계층에

5) 이러한 표본의 제약에 따라 취약가구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원래의 표본을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빈곤과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였다.

비해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업, 취업 희망 비경제활동, 순수 비경제활동 등의 미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취업자의 다음 해 노동력 상태를 보면, 빈곤계층의 경우 81.8%가 여전히 취업자인 반면 비 빈곤계층은 93.9%가 취업상태를 유지하여, 빈곤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빈곤계층에 속한 취업자 가운데 15.1%가 다음 해에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하여 노동시장의 이탈률이 높다. 실업자의 노동력 상태 변화를 보면, 빈곤계층의 취업 가능성은 크게 낮은 반면 실업을 유지하거나 취업 희망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게 높다. 이는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빈곤계층에 속하는 취업 희망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 가능성은 크게 낮은 반면 여전히 취업 희망 비경제활동상태에 머물거나 실업 및 순수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표 5> 빈곤 여부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년평균, 개인 기준)

(단위 : %, 명)

	t+1년도 t년도	취업	실업	취업희망 비경활	순수 비경활	전체
빈곤계층	취업	81.8	3.1	2.6	12.5	384
	실업	25.0	14.3	28.6	32.1	28
	취업희망 비경활	18.2	7.3	21.8	52.7	55
	순수 비경활	4.8	0.9	3.9	90.4	459
비 빈곤계층	취업	93.9	0.9	0.7	4.6	2,855
	실업	59.3	7.0	2.3	31.4	86
	취업희망 비경활	33.2	6.3	15.9	44.7	208
	순수 비경활	13.2	1.6	5.5	79.6	1,42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연간 연결패널

이제 취업자에 국한하여 고용 상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6>에서 빈곤계층에 속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비빈곤계층에 비해 상용직에 머무를 가능성은 크게 낮은 반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임시·일용직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빈곤계층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고착되거나 미취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많은 빈곤계층이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이를 돕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고용주나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미취업 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계층의 취업 가능성이 낮고, 취업하더라도 경력 상승은 제한되며, 빈

변하게 노동 이동을 경험하거나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빈곤 여부별 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년평균, 개인 기준)

(단위 : %, 명)

	t+1년도 t년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	실업	취업희망 비경황	순수 비경황	전체
빈곤 계층	상용직	64.0	0.0	0.0	0.0	4.5	0.0	9.0	6.7	15.7	89
	임시직	11.1	63.0	7.4	3.7	0.0	0.0	3.7	0.0	11.1	27
	일용직	3.8	0.0	76.9	0.0	1.9	0.0	0.0	5.8	11.5	52
	고용주	0.0	0.0	0.0	37.5	37.5	0.0	12.5	0.0	12.5	8
	자영업자	1.3	0.7	2.0	2.0	76.7	2.7	1.3	0.0	13.3	150
	가족종사자	0.0	1.8	1.8	0.0	12.7	76.4	0.0	0.0	7.3	55
비빈곤 계층	상용직	90.3	0.9	0.6	1.3	1.7	0.1	1.2	0.5	3.4	1,508
	임시직	11.7	62.1	3.4	0.5	2.4	1.5	1.9	1.0	15.5	206
	일용직	7.9	5.3	78.3	0.5	1.6	0.0	0.0	1.1	5.3	189
	고용주	3.8	0.0	0.8	69.9	16.9	3.8	0.4	0.8	3.8	266
	자영업자	3.3	0.6	1.0	11.1	73.7	5.2	0.4	1.0	3.5	479
	가족종사자	3.6	1.5	1.0	5.1	6.2	77.4	0.0	0.5	4.6	19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연간 연결패널

이제 빈곤과 미취업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표 7>은 2002년의 빈곤 유형별로 지난 5개년에 걸친 미취업 경험을 보여 주고 있다. 미취업 관련 정보는 한 해의 미취업률(annual non-employment rate)과 5년에 걸친 미취업 경험률(ever non-employment rate), 그리고 5년 내내 미취업 상태에 있느냐(always non-employment rate) 등의 세 가지 지표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5년 동안의 미취업 지속기간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근로능력계층에서 미취업 경험률이 100%인 것은 정의상 2002년에 취업자가 없는 계층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지만, 43.8%가 5년 내내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고, 미취업 기간이 3.9개월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만성적인 미취업이 빈곤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임을 보여 준다. 가사·육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의 어려움과 함께 일자리 획득의 어려움이 장기적인 미취업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빈곤계층과 비 빈곤계층을 비교하면, 미취업률과 미취업 경험률은 근로빈곤계층이 다소 높지만, 5년 내내 장기적인 미취업을 경험하는 비중은 오히려 다소 낮게 나타난다. 특히 근로빈곤계층은 미취업 경험률이 5년 동안 지속적인 미취업을 경험하는 비중의 3.8배(=A/B)에 이르러, 비 빈곤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근로빈곤계층이 미취업 상태로의 진입과 탈출이 비 빈곤계층에 비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근로

빈곤계층은 반복적인 미취업을 경험하고 있다.

<표 7> 빈곤 유형별 미취업 상태의 경험과 지속(개인 기준)

(단위 : %, 년, 명)

	비 빈곤계층	근로능력계층	근로빈곤계층
미취업률	29.3	66.0	33.1
미취업 경험률(A)	48.9	100.0	58.8
항상 미취업률(B)	16.6	43.8	15.4
미취업기간	2.0	3.9	2.2
표본수	18,226	477	1,739

주 1)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심신 장애, 학교 재학 제외

2) 빈곤 유형 분류는 2002년 기준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전체 연결패널

<표 8>은 빈곤 유형별로 취업자 가운데 저소득 취업 상태를 경험하는 빈도(incidence)와 지속기간(persistency)이 제시되어 있다. 근로빈곤계층에 속한 취업자 가운데 50.8%가 중위 소득의 2/3 이하의 낮은 근로소득을 받고 있으며, 5년 동안 저소득 취업자를 한 차례 이상 경험하는 비중은 무려 83.8%에 이른다. 또한 5년 내내 저소득 취업자에 머물러 있는 비중도 취업자의 23.4%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근로빈곤계층에 속한 취업자는 분석 대상기간의 절반에 이르는 2.5년 동안 낮은 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만성적인 저소득이 근로빈곤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며, 따라서 탈빈곤을 위해서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근로빈곤계층의 직업능력을 높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8> 빈곤 유형별 취업자 중 저소득 취업 상태의 경험과 지속(개인 기준)

(단위 : %, 년, 명)

	비 빈곤계층	근로빈곤계층
저소득 취업자 비중	17.3	50.8
저소득 취업자 경험률	36.5	83.8
항상 저소득 취업자의 비중	5.5	23.4
저소득 취업자의 지속기간	0.9	2.5
표본수	7,385	555

주 : 빈곤 유형 분류는 2002년 기준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전체 연결패널

4.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

이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가구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빈곤 탈출률은 빈곤 기간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단순한 로짓 분석이 아닌 빈곤 기간을 고려한 해자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때 빈곤 기간은 ‘년’으로 측정되는 이산 변수이므로, 이산시간 해자드 분석(discrete time hazard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T 를 빈곤 지속기간을 의미하는 확률변수라고 하면, 어떤 개인이 t 시점까지 빈곤 상태가 지속되다가 t 시점에서 빈곤을 탈출할 조건부 확률은 $\lambda(t) = P(T=t | T \geq t)$ 으로 표시된다. T 가 로지스틱 형태를 취한다고 가정하면,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준적인 로짓 형태로 표현된다.

$$\lambda(t) = \exp(t) / [1 + \exp(t)]$$

빈곤 지속기간 T 는 빈곤 주기(따라서 개인)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설명변수들(time varying covariates)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설명변수는 개인 특성과 가구 특성,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빈곤 기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효과 α_{id} 를 함수에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 i 에 대하여 $T_i = \alpha_{id} + \beta_{it}X_{it}$ 로 표시된다.

이제 어떤 개인 i 가 d 라는 빈곤 지속기간이 지속된 상태에서 t 년도에 빈곤을 탈출할 확률은 다음과 같은 해자드 함수 형태로 표시되며, 표준적인 로짓 모형을 통해 추정하게 된다.

$$\lambda_i dt = \exp(\alpha_{id} + \beta_{it}X_{it}) / [1 + \exp(\alpha_{id} + \beta_{it}X_{it})]$$

빈곤 기간을 고려한 빈곤 탈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의 「한국노동패널」 전체 연결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 주기(poverty spell) 자료를 구성하였다. 빈곤주기의 처음은 특정 개인이 빈곤에 진입한 시점이 되며, 그 끝은 빈곤에서 탈출한 시점이 된다. 그러나 조사 1차년도에 이미 빈곤 상태에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빈곤 주기 시작 시점을 파악할 수 없는 좌측 절단(left censoring)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본을 제외할 경우 장기적으로 빈곤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개인을 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였다. 한편 어떤 개인은 단기간의 빈곤 진입과 탈출, 그리고 재빈곤화되는 반복 빈곤(repeat poverty)을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표본에 포함된 개인의 24.6%가 2회 이상의 복수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복수의 빈곤주기(multiple spells of poverty)를 포함하였다.

이산 시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빈곤이 지속되는 년도별로 관측치 자료를 구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빈곤 지속기간이 3년인 개인은 3개의 관측치를 가지며, 5년인 개인은 5개의 관측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의 빈곤주기 자료를 개인-년도 자료(person-year data)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구성된 자료는 1,720명의 5,425개 관측치이다.

추정에 사용한 표본의 특성은 <표 9>와 같다. 종속변수는 빈곤을 탈출할 경우 1, 빈곤에 머무르고 있을 때 0의 값을 가지며, 표본의 21.9%가 빈곤 상태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설명변수로는 개인 특성과 가구 특성(성, 연령, 학력, 가구원수), 개인과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개인의 종사상 지위 및 취업 가구원수⁶⁾⁷⁾) 관련 정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추정모형에 현재의 빈곤 주기 이전에 경험한 과거의 빈곤 경험횟수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반복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개인의 빈곤 탈출 확률을 추정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관측하지 못하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경기순환적인 효과와 함께 특정 연도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년도 더미를 포함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특성을 보면,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 미취업자가 과반수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자인 개인의 가구내 취업 가구원수는 본인을 제외한 값이다.

7)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추가로 통제하여 분석해 보았지만, 표본에서 가구주인 개인이 49.8%를 차지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다중공선성이 크게 나타나, 분석결과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 9> 이산 시간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특성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빈곤탈출 더미	0.219	(0.414)
설명변수		
1.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0.094	(0.292)
임시·일용직	0.116	(0.320)
일용직	0.074	(0.261)
고용주	0.016	(0.124)
자영업자	0.146	(0.353)
무급가족종사자	0.058	(0.234)
실업	0.054	(0.227)
비경활	0.516	(0.500)
2. 빈곤 경험 관련 변수		
과거 빈곤주기 횟수	0.142	(0.359)
빈곤 기간	2.119	(1.326)
3. 가구 특성		
가구원수	3.153	(1.418)
취업 가구원수	0.615	(0.731)
4. 개인 특성		
여성	0.578	(0.494)
15-29세	0.125	(0.331)
30-39세	0.140	(0.347)
40-49세	0.165	(0.371)
50-59세	0.127	(0.333)
60세 이상	0.442	(0.497)
초졸 이하	0.533	(0.499)
중졸	0.173	(0.379)
고졸	0.239	(0.426)
전문대졸	0.017	(0.128)
대졸 이상	0.038	(0.192)
표본수	5,42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빈곤주기 자료

<표 10>에서 추정 모형 I 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빈곤 경험 관련 특성, 그리고 가구 특성을 포함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 모형 II는 모형 I 에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추가로 통제한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관심인 경제활동상태가 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개인의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이 빈곤 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상태가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 등 미취업자의 빈곤 탈출률이 유의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직 임금근

로자의 빈곤 탈출률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미취업의 지속이 빈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취업 상태 또한 빈곤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빈곤이 장기화될수록 빈곤 탈출률은 유의하게 하락하며, 과거에 빈곤을 경험한 개인은 보다 장기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장기적인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구내에 취업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신속하게 빈곤을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정모형 II에서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저학력자는 장기적인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50세 이상의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빈곤 탈출률이 30대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직업능력이 낮은 근로취약계층이 장기적인 빈곤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10> 빈곤 탈출 결정 요인(이산시간 분석)

	추정모형 I			추정모형 II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1. 경제활동상태						
임시·일용직	-0.441	(0.136)	***	-0.305	(0.142)	**
고용주	-0.570	(0.270)	**	-0.513	(0.275)	*
자영업자	-1.059	(0.134)	***	-0.893	(0.144)	***
무급가족종사자	-1.468	(0.182)	***	-1.224	(0.195)	***
실업	-1.531	(0.206)	***	-1.436	(0.209)	***
비경활	-1.223	(0.109)	***	-0.989	(0.122)	***
2. 빈곤 경험 관련 특성						
빈곤 기간	-1.010	(0.042)	***	-0.956	(0.044)	***
과거 빈곤주기 횟수	-1.417	(0.118)	***	-1.358	(0.118)	***
3. 가구 특성						
가구원수	-0.209	(0.029)	***	-0.230	(0.033)	***
취업 가구원수	0.654	(0.059)	***	0.673	(0.061)	***
4. 개인 특성						
여성				-0.123	(0.082)	
15-29세				-0.269	(0.136)	**
40-49세				-0.150	(0.130)	
50-59세				-0.280	(0.145)	*
60세 이상				-0.387	(0.138)	***
초졸 이하				-0.206	(0.113)	*
중졸				-0.150	(0.115)	
전문대졸				-0.184	(0.261)	
대졸 이상				-0.260	(0.187)	
-2 Log L	4276.2			4251.2		
N	2.656					

주 1) 기준변수는 남성, 30-39세, 상용직 근로자임

2) 추정모형에는 연도 더미를 포함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빈곤주기 자료

5.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가구-개인의 연계 패널자료’를 구성함으로써 가구 단위의 빈곤 여부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연계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기준으로 근로빈곤계층은 빈곤계층의 절반 이상인 5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의 양극화에 따라 근로빈곤이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근로빈곤계층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영세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낮은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취업자가 절반을 상회하는 54.8%에 이르고 있다.

셋째,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보더라도, 근로빈곤계층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반복적인 미취업에 따른 만성적인 저소득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력 상승 기회가 제한적이다.

넷째,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미취업만이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 종사자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빈곤 탈출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다. 또한 장기적인 빈곤 상태의 지속이나 반복적인 빈곤 경험은 빈곤의 지속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여건이 안 되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근로빈곤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획득을 지원하는 탈빈곤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계층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80%가 주 3일 이상의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조건 부과를 면제받고 있다. 즉, 조건부 수급자의 대다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활동을 우선하고 있으며, 또한 자활사업이 수급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직업적응훈련⁸⁾에 치중되어 있다(노대명·박

찬임 외, 2004). 그러나 근로빈곤계층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벗어날 만큼의 소득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빈곤을 탈출하더라도 빈곤선 주위에서 이동하여 재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 단순히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activation policy)만으로는 탈 빈곤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로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탈빈곤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⁹⁾, 자활사업 등의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경력개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빈곤 탈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인회(200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8호
- 금재호(2003), 「일과 빈곤」,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노대명·박찬임 외(2004),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노동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4.11), 「참여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 이병희·정재호(2002), 「경제위기 이후 빈곤구조 분석 : 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제52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홍경준(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제5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황덕순(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한국노동연구원
- 황덕순(2000), 「빈곤계층의 경제활동 분석과 빈곤대책 수요 추정」, 황덕순·이병희·이주
-
- 8) 직업적응훈련은 근로의욕 및 자활의지가 낮은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을 키우는 수준의 저강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 9) 정부는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서 근로빈곤계층의 탈빈곤 정책으로 확대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교육·주거서비스를 지원하여 일할 여건을 조성하고, 취업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하며, 일자리가 없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창업 지원을 통해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11).

회, 『실업실태 및 '98~'99 실업대책 효과 분석』,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Antolin, P., T. T. Dang and H. Oxley(1999), "Poverty Dynamics in Four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212

OECD(2003), "The Labour Mobilisation Challenge : Combating Inactivity Traps and Barriers to Moving Up Job Ladders," *Employment Outlook*